

# 이명박 정부 시기의 종교갈등 사례와 그 해소를 위한 실천방안

조기룡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조교수

- I. 서언
- II. 종교갈등의 조작적 정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 III. 이명박 정부 시기의 종교갈등 사례 범주
- IV. 종교갈등 사례 유발 원인
- V. 이명박 정부 시기의 종교갈등해소 실천방안
- VI. 결론

## 요약문

종교갈등은 종교집단들 간 갈등, 하나의 종교집단 내 갈등, 종교집단과 더 큰 사회 간 갈등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사회에는 그동안 잠재해있던 종교갈등이 표면화하면서 개신교와 불교 간 그리고 불교와 정부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종교집단들 간 갈등, 그리고 종교집단과 더 큰 사회 간의 갈등에 초점을 두고 이명박 정부 시기의 종교갈등과 그 해소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증가한 불교와 개신교 간 갈등사례들은 땅 밟기와 성시화(聖市化) 운동으로 범주화가 가능한데, 우발적이 아닌 성격에 전거를 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또한 불교·개신교와 정부 간 갈등사례들은 정부의 종교편향과 국고지원의 적합성 논란으로 범주화가 가능한데, 이는 종교의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를 매개체로 양 종교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표면화된 종교갈등 사례들의 발생에는 이전

부터 잠재해있던 한국개신교 근본주의의 배타성과 상대 종교에 대한 무지 등과 근래에 심화되고 있는 한국종교시장의 경쟁화, 개신교의 영남권 선교 공격성 강화, 그리고 장로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개신교의 사회 주류의식 심화와 불교의 위기의식 표출 등이 복합적·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원인과 사례들을 분석하여, 불교와 개신교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종교집단의 실천방안으로 종교협력운동의 대중화와 이웃종교에 대한 교육과 학습을 고찰하였다. 또한 불교·개신교와 정부 간 갈등해소를 위한 종교집단과 정부의 실천방안으로는 종교의 국고 지원 의존 탈피를 통한 홀로서기,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의 지속·확대와 종교차별 공무원 징계의 법규화, 증오범죄법 제정을 고찰하였다.

## 주제어

종교갈등, 땅 밟기, 성시화(聖市化) 운동, 종교편향, 근본주의, 국고지원, 증오범죄

전쟁' 내지 '종교분쟁'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를 입증하듯,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공공연히 '영적 전쟁'까지 선언하고 있다. MB정부 들어 심화되고 있는 종교갈등을 바라보는 거시적 인식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MB정부 출범 이후 불교와 개신교 간 그리고 종교집단과 정부 간에 존재했던 갈등 사례들을 범주화하여 그 갈등이 심화되는 원인과 배경을 살펴본 후 종교집단과 정부의 실천적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 서언

한국사회는 다종교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여러 종교가 비교적 원만하게 공존하여왔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이하 MB정부) 기간에는 역대 어느 정부 시기보다 종교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갈등은 종교집단과 종교집단에서 나아가 종교집단과 정부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되었다. 과거 종교간 갈등이 일부 광신도들에 의한 편협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면, 현재는 개신교계와 불교계, 그리고 불교계 또는 개신교계와 정부의 갈등이 표면화한 것이다. 표면화된 개신교와 불교의 갈등사례로는 땅 밟기와 성시화운동을, 불교 또는 개신교와 정부의 갈등사례로는 정부의 종교편향 논란과 국고 지원의 적합성 논란을 들 수 있다.

한국사회가 더 이상은 종교갈등의 안전지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소리마저도 들린다. 과거에는 들을 수 없었던 '종교편향' 내지 '종교차별'이라는 용어와 현상이 일반화되었고, 더 나아가 '종교

## II. 종교갈등의 조작적 정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역사적으로 종교는 여러 수준에서 갈등과 관련되어 있다. 맥과이어(M.B. McGuire)는 종교갈등의 양상을 세 종류의 형식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종교집단들 간(between religious groups)의 갈등으로서 한국사회 내 불교집단과 개신교집단 간의 갈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사회 내 종교갈등의 가장 대표적인 형식이라 하겠다. 이것은 특히 현대 종교다원화 사회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둘째는 하나의 종교집단 내(within a religious group)에서의 갈등이며, 예컨대 성직자(출가자)집단과 평신도(재가자)집단 간의 갈등 등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종교집단과 더 큰 사회 간(between a religious group and the larger society)의 갈등으로서 정부의 종교편향과 국고지원과 이를 둘러싼 종교집단의

갈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sup>1)</sup>

본고에서는 종교갈등을 종교집단들 간의 갈등 그리고 종교집단과 더 큰 사회 간의 갈등,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본고의 연구 대상 기간인 MB정부 들어 종교집단들 간의 갈등 즉 불교와 개신교 간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또한 종교집단과 더 큰 사회 즉 불교·개신교와 정부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 의미하는 종교갈등을 보다 명확히 조작적으로 정의하면, 종교집단들 간의 갈등은 불교와 개신교 간의 갈등을, 종교집단과 더 큰 사회 간의 갈등은 종교집단·불교·개신교과 정부 간의 갈등을 의미한다.

종교갈등에 대한 본고의 첫 번째 초점인 우리사회의 종교집단들 간 갈등, 즉 한국사회의 불교와 개신교 간 갈등에 대한 연구는 양 종교 간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불교와 개신교 간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상당수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이 양 종교 간의 대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보다는 필요성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그 담론은 한국교회의 근본주의에 대한 문제점과 이의 극복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논문으로는 정진홍의 「한국기독교에서 '종교간의 대화를 모색함-한 종교학도의 소견」(2004), 김진의 「종교간의 갈등과 화해」(2001), 이은봉의 「한국사회와 종교-한국사회와 종교 다원주의론」

(1998), 이원규의 「한국교회의 종교적 배타성의 문제」(1998)와 「근본주의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고찰」(1995), 칼 요세프 쿠셀(Karl-Josef Kuschel)과 김진의 공동연구논문인 「기독교 종교간의 대화에서 무능력한가-세계종교와의 대화에 직면한 그리스도의 유일성 문제에 대하여」(1997), 김경재의 「한국 사회의 종교적 갈등과 관용」(1995), 박종천의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즘과 근본주의」(1995), 김균진의 「타 종교와 기독교의 관계」(1993), 김성건의 「한국 개신교와 근본주의 문제」(1988), 윤이흠의 「기독교 다종교사회-종교간의 갈등 어떻게 할까」(1985), 황필호의 「종교와 종교의 만남은 가능한가?」(1982), 이장식의 『근본주의의 역사』(1960) 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저서로는 종교인 대화 모임에서 출간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화』(2010), 배덕만의 『한국 개신교 근본주의』(2010), 김승혜의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수행: 한국종교와 대화문화』(2005), 윤병상의 『종교간의 대화』(1999), 변선환의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1997) 등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불교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주로 신학자나 종교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사회에서 불교와 개신교의 대화를 불교적 관점에서 제시한 불교학자의 연구로는 윤영해의 「종교 간의 대화를 위한 불교 정신, 자기否定」(2006), 김용표의 「불교의 관점에서 본 종교간의 갈등문제」(2002)와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불교의 입장-새천년에 대응하는 불교의 저력」(2000), 전호련(해주)의 「한국의 종교간의 대화와 불교」(2002), 양은용의 「원불교에서 본 종교간의 대화원리」(2002)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초점인 종교집단과 더 큰 사회 간의 갈등인 종교와 정부

1) Meredith B. McGuire, *Religion: The Social Context*, 3rd ed.(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2), pp.185~186.; 김종서, 『종교사회학』(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pp.92~93.

[국가]의 관계는 서구 사회에서 오랫동안 검토되어 온 주제이며,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 성과들도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해외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선교학 분야의 논문과 외국의 국가-종교 관계를 검토하는 논문 등이 다수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정부(국가)와 종교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연구 성과들은 실제로 그다지 많지 않은 형편이라 할 수 있다.<sup>2)</sup>

한국사회 내 종교와 정부권력의 유착 및 갈등 관계 분석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로는 유승무의 「범불교도대회를 통해 본 종교갈등: '총성없는 전쟁」(2009), 박수호의 「종교정책을 통해 본 국가-종교간 관계: 한국 불교를 중심으로」(2009), 김광식의 「10·27법난의 발생 배경과 불교의 과제: 불교사적인 관점의 시론」(2009), 박명수의 「다종교 사회에서의 한국 개신교와 국가권력」(2009), 박희택의 「불교의 정치세력화와 정치의 불교세력화에 관한 성찰」(2008), 김승태의 「일제 말기 한국기독교계의 변질·개편과 부일협력」(2006), 강인철의 「해방이후 4·19까지의 한국교회와 과거 청산 문제」(2006), 오경환의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1997), 지선 스님의 「자주화 문제의 역사적 고찰과 불교 자주화의 과제」(1995), 강인철의 「미군정기의 국가와 교회: 기독교회를 중심으로」(1995), 강돈구의 「미군정의 종교정책」(1993), 그리고 종교평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자료집인 『불교와 국가권력, 갈등과 상생』(2009) 등이 있다.

필자는 종교갈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면서, 종교집단들 간

2) 박 수호, 「종교정책을 통해 본 국가-종교간 관계: 한국 불교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39집(대구: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9), pp.168-169.

갈등 그리고 종교와 정부의 갈등 모두 기독교 계통의 신학자나 종교학자들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종교갈등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들이 담론의 범주에 머무르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도 있었다. 이에 본고는 불교학자의 관점에서 종교갈등의 해소를 위한 실천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 III. 이명박 정부 시기의 종교갈등 사례 범주

MB정부 시기의 종교갈등 사례를 종교집단 간 갈등인 불교와 개신교 간 갈등사례와 종교집단과 더 큰 사회집단 간 갈등인 불교·개신교와 정부 간 갈등사례로 나눈 후 범주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MB정부 출범 후 사회갈등으로까지 심화된 사례들을 선정하였는데, 불교와 개신교 간 갈등사례들은 땅 밟기와 성시화 운동으로 범주화가 가능하며, 불교·개신교와 정부 간 갈등사례들은 정부의 종교편향과 국고 지원의 적합성 논란으로 범주화가 가능하다.

#### 1. 불교와 개신교 간 갈등 사례 범주

불교와 개신교 간 갈등은 불교에 의한 유발 사례보다는 개신교에 의한 유발 사례가 많은데, 이는 한국개신교의 근본주의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고가 두 종교 간 갈등사례를 범주화함에 있어서 개신교에 의한 유발된 땅 밟기와 성시화 운동을 갈등 사례

로 제시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MB정부 들어 증가한 이 두 사례는 모두 성경에 전거를 두고 있다.

### 1) 땅 밟기

‘조계사 땅 밟기’, ‘봉은사 땅 밟기’, ‘동화사 땅 밟기’. 개신교인들이 사찰을 찾아와 예배를 하며 사찰이 무너지라고 기도하는 내용은 담은 동영상 인터넷 공간에서 급속히 퍼지며 주요 언론매체에서 비중 있게 다루었던 종교갈등 사례이다. 땅 밟기를 불교에 대한 개신교의 일반적 태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땅 밟기가 일회성의 우발적 사건이 아닌 성경에 그 근거를 두고 지속적·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간과하기 어려운 종교갈등 사례에 해당한다.

소위 ‘땅 밟기’는 구약성서의 여호수아 제6장 ‘여리고 성(城) 함락’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sup>3)</sup> 여리고 성은 예루살렘 동북쪽 28km, 요단강 서쪽 11km에 위치해 있던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철옹성의 성읍으로 알려져 있다. 이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의 지시에 따라 무장한 자들로 하여금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도는 행위를 엿새 동안 하게 한다. 엿새 동안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sup>4)</sup>을 잡고 언약궤<sup>5)</sup> 앞에서 나아갔는데 일곱째 날에

3) ‘여리고 성’ 사건은 고고학적 연구를 통하여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한국개신교가 성서무오류를 믿는 근본주의가 주류이기에 성경의 ‘여리고 성 함락’을 인용하였다.

4) 끝이 위로 구부러진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양각 나팔은 지금도 유대인 회당에서 사용되고 있음.

5) 히브리어로는 ארון הברית(아론 하버리스)이며, 모세의 십계명 석판을 보관했던 도금형 나무상자를 지칭한다.

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외칠 것을 이른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한다.

땅 밟기는 성경적으로 정의하면 기도자가 자기 마을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이웃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신자들은 땅 밟기 기도를 하면서 사회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섬김의 자리로 들어간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도시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땅과 가족을 유산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한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땅 밟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거주지이자 유산인 집과 가족을 바라며 기다리는 일정한 체류이다.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땅 밟기는 그들의 종교적 기도 행위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찰에 대한 땅 밟기는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존재한다. 즉 사찰을 우상과 신전이 가득했던 여리고 성으로 간주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찰 경내를 들고 법당에 들어가 사찰이 무너지라고 외친 행위는 여리고 성의 함락 당시 상황을 모방한 것이다. 이러한 땅 밟기 행위는 교회신도인 자신들을 무장한 자들로 인지하고 사찰을 전쟁터인 여리고 성으로 간주한 시대착오적이며 상황착오적인 행동이다. 수천 년 전의 상황을 현재 상황에 적용하는 행위 자체가 착오이며 다종교사회인 한국사회에서 이웃종교를 전쟁의 적

으로 간주한 행위가 착오이다.

이웃의 교회가 이웃의 사찰을 전쟁의 적으로 간주하는 땅 밟기는 일부 개신교 단체에서 저지른 사건이지만 지속성과 의도성으로 볼 때 간과할 수 없는 종교갈등 사례이다. 더욱이 ‘땅 밟기’라는 주제로 인터넷을 검색하면 상기한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땅 밟기 행위가 종교행위라는 명목 하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신교인 자신의 입장에서는 땅 밟기가 신의 말씀에 의한 종교행위일지는 몰라도 타종교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공격행위가 된다.

## 2) 성시화(聖市化) 운동

성시화 운동이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10)란 성경의 구절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부패하고 타락된 도시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어 복음이 충분한 성시(聖市)로 만들겠다는 부흥운동이다.<sup>6)</sup> 이와 같이 성시화운동은 도시의 부정부패 및 범죄 일소를 주장하고 있다. 외면상의 성시화 운동은 타락한 도시를 행복한 도시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무랄 바도 문제될 바도 없다. 하지만 그 내면에 자리한 방법을 다시 보면, 시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통치되는 하나님의 영토를 만드는 운동이다. 성시의 타종교인 내지 무종교인은 기독교인이 되거나 탄 곳으로 이주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6) 대한민국 성시화 운동본부 홈페이지(<http://www.holy25.com>) 참고

성시화 운동의 효시는 16세기 종교개혁가인 장 칼뱅(Calvin, Jean)이 스위스 제네바시를 지배할 때부터이다. 이때 제네바 시민의 모든 생활은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고 행정·사법·입법 등 모든 사회시스템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 구현에 있었다. 성시(聖市)는 모든 시민이 성경을 생활표준으로 삼고,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기관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기독교 도시를 의미한다. 칼뱅의 지배 시절 제네바에선 음악과 춤·술·극장 따위가 모두 사라졌다. 규정 위반자는 종교법원에 회부됐다. 수요일, 일요일 예배에 불참하는 자는 3일 동안 굶기고, 고기와 술을 먹은 자는 사형에 처했으며, 타 종교를 가진 자 역시 사형에 처했다. 처벌이 얼마나 가혹했던지 칼뱅 체제 4년 동안 58명이 화형 참수 혹은 교수형으로 사형됐다. 고문도 극심해, 아예 심문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이 수도룩했다고 한다. 바로 이것이 칼뱅의 제네바 성시화 운동이었다.

한국에서 성시화 운동은 고(故) 김준곤(1925~2009) 목사에 의해 강원도 춘천에서 1972년 처음 시작됐다.<sup>7)</sup> 세간에 이 운동이 주목받게 된 것은 2004년 정장식 전 포항시장의 시 예산 1% 성시화운동 사용 의지 발언과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 봉헌 발언을 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성시화 운동은 지자체의 기관장으로 당선된 개신교인들에 의해 공개적인 선교운동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으며, MB정부 이후 성시화 운동과 관련한 공직자의 종교편향이 심화되면서 불교와 개신교 간 종교갈등으로 확산되었다.<sup>8)</sup> 또한 공직

7) 《국민일보》, 2010. 09. 08.

8) MB정부 시기의 공직자의 성시화운동으로 인한 종교갈등 사례로는 김황식 하남시장의 전국 복음화 발언, 안상수 전 인천광역시장의 인천 복음 선진도시 건설 발언, 주대준 청

자의 종교편향은 정부의 종교편향으로 인식되면서 종교집단(불교·개신교)과 정부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된 측면이 있다.

현재 성시화 운동은 대한민국 성시화 운동본부와 전국 홀리 클럽(Holy Club) 연합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성시화 운동을 교회에서 개인으로, 개인에서 도시로, 그리고 도시에서 국가로 단계적으로 확장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sup>9)</sup> 그러나 이 성시화 운동은 다종교국가인 우리나라의 정치·사회·문화·교육 등 사회의 모든 영역을 기독교화하겠다는 의도의 표현이기에 타종교인 내지 무종교인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만이 존재하는 국가와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배타적 이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다종교사회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공존의 가치를 저버리고 기독교의 유일신이 지배하는 신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다종교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시화 운동은 종교적 다원성과 사회의 평화를 깨는 반사회적 운동으로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 2. 불교·개신교와 정부 간 갈등 사례 범주

한국사회에서 국가와 종교의 관계 맺음은 상호불간섭과 중립을 핵심으로 하는 정교분리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 각 정권에 의해 추진된 종교정책은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편향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은 이승만·김영삼 등 독실한 개신교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더욱 두드러졌다. 이러한 경향은 독실한 개신교 장로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보이고 있다.

### 1) 정부의 종교편향

MB정부 출범 후 불교계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여권에 대한 산문 폐쇄로까지 표면화되었다. 정부와 여당 정치인의 사찰 방문 금지 및 스님들에게 정치인과의 접촉 금지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이 불교와 정부의 갈등이 심화된 핵심에는 불교계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MB정부의 종교편향’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의 종교편향은 공공기관 또는 공직자에 의하여 행해지게 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주체는 공직자라는 점에서 공직자의 종교관이 정부의 종교편향 여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는 곧바로 타종교인과 비종교인의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제20조는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①항은 종교자유 의 조항이고 제②항은 정교분리의 원칙이다. 대한민국의 정부와 공직자는 이 조항에 의거하여 종교편향적으로 공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MB정부에서는 유난히 종교편향 논란이 심각하다. 개신교 장로 출신 대통령에 대한 불교계의 우려와 거부감의 표현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MB정부 들어서 공공기관과 공직자들

와대 경호처장의 모든 정부 부처의 복음화 발언 등을 들 수 있다.

9) 대한민국 성시화 운동본부 홈페이지(<http://www.holy25.com>) 참고



에 의한 종교편향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발생한 종교편향 사건들이 19건인데 MB정부는 단 4개월 만에 이 수치에 도달하였다.<sup>10)</sup>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종교 활동은 자유이다. 공직자가 사적인 종교모임에서 개인자격으로 종교적 발언을 하거나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종교행사의 자유'에 해당되어 헌법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적인 종교 모임에 참석하더라도 그 모임에 공직자의 직함을 가지고서 또는 행정부처의 장으로 참가하여 축사나 발언을 하는 것은 넓게 해석하면 공무집행의 범위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종교의 봉헌서에 기관장의 직함과 휘장까지 새겨서 바치는 행위나 '정부 부처를 복음화 하는 것이 꿈'이라고 공언하거나, 국가의 공식행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발언 등은 공직자가 개인자격으로 한 종교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분명 공직자들이 공직의 직함을 사적인 종교 활동에 이용하는 것과 공직자의 종교 편향적 행위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또한 공직자들의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적 행동은 타종교인과 무종교인의 '종교의 자유'라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sup>11)</sup>

개신교와 불교 간 갈등이 격화되는 현 시점에서 정부의 종교 중립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한국종교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양 종교가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종교편향

을 보인다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종교는 더욱 강하게 저항을 하게 될 것이고, 양 종교가 사회갈등을 불사하면서라도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종교전쟁으로 격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은 다종교사회에서 사회갈등·분열의 조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부처 공직자들이 종교적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직무에 임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종교갈등을 종식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급선무이다.

## 2) 국고 지원의 적합성 논란

국고 지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종교를 초월하여 종교 중립적으로 대의명분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2011년 정부 예산 편성 시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이 정치권과 불교계와의 갈등은 물론 불교와 개신교 간 정부의 종교편향 논란을 촉발시켰다.<sup>12)</sup> 불교계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정부가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 관광자원으로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불교계에 제안하여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성장시켜온 사업<sup>13)</sup>에 대한 예산 삭감은 종교편향이라고 반발하였다.<sup>14)</sup> 반면 개신교계는 명목상은 전통문화체험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불교의 새 형식의 포교방법'이요, '불교의 수

10) 《불교신문》, 2008. 07. 02.

11) 《광주일보》, 2008. 09. 07.

12) 국회는 2011년 정부 예산을 심의하면서 당초 국회 문방위에서 요청한 185억 원 중 정부안 109억 원과 여수 엑스포 템플스테이 예산 13억 원 등을 포함해 63억 원이 삭감된 122억 원만 통과시켰다.

13) OECD는 템플스테이를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상품으로 선정하였고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선정한 바 있다.

14)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이후 조계종은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을 경우 종단이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템플스테이 운영에 관한 정부 예산 지원을 전면 거부하고 불교 자주화를 선언하였다.

익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종교편향이라고 반박한다.

이런 맥락의 불교와 개신교 간 또 다른 갈등이 문화재 보수 지원이다. 문화재 보수 지원에 대하여, 불교계는 불교문화재가 불교계 소유의 종교문화유산이지만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어서 법률에 의거하여 지원되는 문화재 유지 보수비임을 강조하고 있다.<sup>15)</sup> 아울러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에 따른 각종 규제에 의한 불편과 유지 보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것임도 지적하고 있다. 반면 개신교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08년 문화재 유지 보수비가 포함된 종교문화기반구축 사업비 227억 원 중 67.4%에 해당하는 153억 원이 불교계에 지원된 것은 종교인구 비율에도 맞지 않는 종교편향적 국고 지원이라고 주장한다. 2005년 인구센서스 조사결과, 불교인은 22.8%, 개신교인은 18.3%, 가톨릭인은 10.9%로 개신교와 가톨릭을 합한 수치가 불교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에 훨씬 많은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종교편향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템플스테이 예산과 문화재 보수 지원이 개신교계에서 주장하는 종교편향적인 정부 국고 지원 사례라고 한다면, 그 반대의 주장 사례는 종교사학 지원금[재정결함보조]과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이다.

종교사학 지원금이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방교육청을 통해 '재정결함보조' 항목으로 사학에 지원하는 예산 중 종교계에서 설립한 사학에 지원한 예산을 지칭한다. 2008년의 경우 6

천 3백억 원이 넘었으며, 이 중 개신교가 전체의 68%인 4,309억 원, 천주교가 18%인 1,106억 원, 그리고 불교가 7%인 452억 원을 지원받았다. 불교계는 기독교 계열 사학법인에 종교사학 지원금이 집중되는 것은 종교단체가 설립한 종교사학의 숫자가 기독교가 많기 때문으로 그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으나, 개신교 사학에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이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어서 선교행위에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개신교는 공교육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학이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주지의 사실로 개신교계의 사학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개신교계가 우리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해오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한다. 또한 정부가 교육에 지원한 것을 개신교 선교에 사용했다고 불교계에서 주장한다면, 이는 무지에서 나온 오해이거나 의도적 곡해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즉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급여를 선교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종교사학 지원금과 더불어 불교계는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고지원금도 종교편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정부가 가톨릭이나 개신교계의 사회복지시설에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보다 훨씬 많은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개신교계는 정부가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사회복지분야에서 개신교가 선도적으로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해오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시설 수가 불교계 보다 월등히 많아졌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다.

이상에서 개신교는 템플스테이 예산과 문화재 보수 지원을 불교는 종교사학 지원금과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을 대표적인 국고 지원의 종교편향 사례로 간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15) 2010년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의 60%와 비지정문화재의 80%가 불교문화재이다.

다. 하지만 종교단체에 대한 국고 지원의 정교분리원칙 위배 여부를 차치하고 보았을 때 양 종교의 주장은 다분히 아전인수(我田引水)의 성격이 강하다. 개신교와 불교는 공히 국고 지원의 성격과 규모에 대하여 각각의 사례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모순된 주장을 제기하는 측면이 있다. 먼저 국고 지원의 성격과 관련하여 템플스테이 예산과 문화재 보수 지원은 전통문화진흥이라는 명분을, 종교사학 지원금과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은 교육의 신장과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고 지원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템플스테이 예산과 문화재 보수 지원은 불교가 지정문화재의 상당수를 유지관리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국고지원금을 받는 것이며, 종교사학 지원금과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과 관련해서는 개신교가 교육과 사회복지에 대하여 활발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연유로 종교사학과 개신교계 사회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국고 지원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양 종교는 상대방의 명분과 현실에 대한 이해는 도외시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종교편향을 강조하면서 갈등의 양상을 빚고 있다. 양측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정부의 종교단체에 대한 국고 지원이 한국사회에서 종교갈등을 야기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 IV. 종교갈등 사례 유발 원인

모든 사건과 사고의 사례에는 원인이 있듯이 MB정부 시기의 종

교갈등 사례들에도 유발 원인이 있다. 이에 MB정부 시기에 종교갈등 사례들을 유발한 원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III장에서 제시한 종교갈등 사례들로부터 각각의 종교갈등 원인들이 기계적으로 추출될 수는 없다. 하나의 종교갈등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유기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에 II장의 선행 연구들과 정부와 각 교단의 자료들 중 MB정부 시기의 갈등사례와 연계된 유발 원인들을 고찰하여 ① 한국개신교 근본주의의 배타성, ② 상대 종교에 대한 무지, ③ 한국종교시장의 경쟁화, ④ 개신교의 영남권 선교 공격성 강화, ⑤ 장로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개신교의 사회 주류의식 심화와 불교의 위기의식 표출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유발 원인들 중에는 한국개신교 근본주의의 배타성과 상대 종교에 대한 무지처럼 MB정부 이전부터 잠재해 있었던 원인들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유발 원인들은 한국사회 종교갈등의 근원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장로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개신교의 사회 주류의식 심화와 불교의 위기의식 표출은 종교집단과 정부 간 갈등의 유발 원인으로, 다른 네 가지는 종교집단 간 갈등 유발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표층적인 시각이며 보다 심층적으로 보면 다섯 가지 요인은 종교집단과 정부 간 갈등 그리고 종교집단 간 갈등에 직·간접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다.

## 1. 한국개신교 근본주의의 배타성<sup>16)</sup>

한국교회는 근본주의적 성향이 매우 강하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의 조사를 따르면, '성경은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목회자가 84.9%, 평신도는 92.3%에 달한다. 한국종교문화연구소의 장석만 연구원은 '한국교회의 70~80%는 근본주의 교회라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sup>17)</sup>

한국개신교 내에 근본주의적 성향이 조성된 것은 초기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이다. 1884년 한국에 상륙한 최초의 두 미국 선교사였던 장로교의 언더우드와 감리교의 아펜젤러를 비롯하여 초기 선교사들은 '성경주의적' 보수주의 신앙과 신학을 한국인들에게 주입하였고, 그 결과 성경은 한국교회 안에서 절대적 권위를 차지하게 되었다.<sup>18)</sup>

16) 1850년대 유럽에서 들어오기 시작한 자유주의 신학에 반발하여 기독교의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운동인 근본주의(根本主義, fundamentalism)는 특히 미국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성서의 많은 부분 특히 창조와 기적에 관한 기록을 신화나 설화로서 이해하고자 했는데, 이에 반하여 근본주의 신학에서는 성서는 그 글자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축자영감설을 주장하였다. 즉, 성서는 정확하고 오류가 없으며, 역사와 과학적 사실을 담고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 실례로 한국교회에는 구약성서의 창조이야기를 과학적 사실로 해석하여, 진화론에 반대하는 한국창조과학회라는 기독교단체가 존재한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를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근본주의자들은 예수는 하나님(하나님)이며, 육체적으로 부활했다고 주장한다. 근본주의자들은 축자영감설에 뿌리를 둔 성서 이해에 따라, 성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bible believing Christian)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근본주의라는 말은 1915년 근본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신앙변증서인 '근본'을 출판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17) 윤 동욱, 「복음주의, 알고 보면 기독교주의?」, 《한겨레 21》536호(2004년 12월 2일), p.41에서 재인용.

18) 초창기 장로교와 감리교의 신학반의 교수진을 살펴보면 이런 정황은 더욱 분명해진다. 후일 평양신학교와 협성신학교로 각각 발전한 장로교와 감리교의 신학반에는 총

그리고 이러한 근본주의는 한국의 신학교육에 투영되어 초기 한국의 목회자들과 신자들에게 깊이 각인된다. 1920년대 장로교와 감리교의 신학반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성경 과목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재학 내내 성경 66권을 한 번씩 읽고 공부하도록 교과과정을 만든 반면 성서 원어나 현대적 의미의 성서 신학은 전혀 강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sup>19)</sup>

이와 같이 근본주의적 성향의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에 전달된 미국 개신교 근본주의는 한국에서 193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신앙의 요체로 내재화되기 시작했다. 이 당시 장로교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 '신구약성경(新舊約聖經)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正確無誤)한 유일의 법칙이니라'고 진술했고, 성결교는 '성경은 구원함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기록한 책이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성서에 기록되지 않고 혹은 성서에 증명되지 아니한 것은 마땅히 믿을 교리가 아니며 또한 구원함에 합당치 아니한 줄로 인정할지니라'고 천명했다.<sup>20)</sup> 이 두 교단 모두 성경의 완전영감과 무오류를 주장했던 근본주의와 같은 입장에서 서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교회의 초창기부터 미국 근본주의 신앙이 한국교회

55명의 교수가 있었다. 그 가운데 한국인 교수 16명을 제외한 39명의 교수 중 33명이 미국인이었다. 장로교 선교사 중 출신 학교가 밝혀진 16명 가운데 7명이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이었다. 당시 프린스턴 신학교는 벤자민 워필드와 그레샴 메이첸의 영향 하에 근본주의 신학의 요람으로 전성기를 누리던 때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에 미국의 근본주의적 신학이 전수되고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음이 틀림없다. : 이 만열, 『한국기독교의 민족의식』(서울: 지식산업사, 1991), pp.482-485.

19) 이 만열, 『한국기독교의 민족의식』(서울: 지식산업사, 1991), p.481.

20) 이 덕주, 「한국교회와 근본주의: 한국교회사적 입장」, 『한국기독교사상』, 한국교회사연구원 편(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8), p.27.

의 교리와 신앙고백으로 수용됨으로써, 이후 한국교회 내에는 근본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작동하게 된 것이다.<sup>21)</sup>

성경의 무오류를 주장하는 근본주의는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유일신인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 종교 간의 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고히 유지한다. 이에 근본주의는 종교 다원주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다른 종교와 갈등 관계를 유발하게 된다. 여러 종파, 교파, 종단이 공존하는 사회를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 상황이라 부른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사회는 분명히 종교 다원주의 사회이다.<sup>22)</sup> 2008년 현재, 한국에는 자생 종교와 외래 종교 등을 합해 510여 개 이상의 교단·교파가 존재한다. 이 중 불교의 종단 수는 103개, 개신교의 교단 수는 12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sup>23)</sup> 한국은 문자 그대로 종교전시장을 방불하게 할 종교 다원주의 상황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종교 다원주의 상황에서 생겨나는 하나의 심각한 부작용이 종교 갈등이다. 종교전시장과 같은 한국의 종교 다원주의 상황 하에서 근본주의인 한국개신교는 종교갈등을 일으키는 우선적인 근원지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근본주의 입장에서는 타종교인은 이웃종교인이 아닌 선교 내지 개종의 대상에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종교를 종교로 존중하지 아니하고 선교와 개종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태도는 필연적으로 종교 간의 첨예한 대립과

21) 배 덕만, 『한국 개신교 근본주의』(대전: 도서출판 대장간, 2010), p.37.

22) 이 원규a, 『한국교회의 종교적 배타성의 문제』, 『기독교사상』 통권 제479호(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p.36.

2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서울: 주식회사 모나미, 2008), pp.3-9.

적대감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sup>24)</sup>

종교사회학자인 이원규 교수는 한국개신교의 종교적 배타성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한다.

타종교에 대한 적대감이나 거부감은 개신교 안에서도 소위 근본주의적 [보수적인] 교파들(예를 들면 예장 합동, 예장 고신, 침례교, 성결교)의 경우 더욱 심하다. 그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종교성이 강할수록 종교적 배타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개신교인 가운데서 근본주의(정통주의) 교리를 잘 믿는 교인일수록, 스스로 믿음이 깊다고 생각하는 교인일수록,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교인일수록, 종교적 체험을 자주 하는 교인일수록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성은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난다. 바로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종교갈등과 나아가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이른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sup>25)</sup>

이런 상황에서 한국사회에서 종교인구 수가 가장 많은 불교는 개신교의 최우선의 공격대상이 되었으며, 그 배타감은 ‘훼불(毀佛)’의 방식으로 종종 표출되고는 했다. 아마도 붓다를 우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일 것이다. 훼불 사건은 근본주의 개신교와 불교 간 갈등의 주

24) 이원규 교수는 이런 배타적인 태도의 신학적 근거를 ① 유일신 사상을 가진 종교가 일반적으로 배타성이 강하며 ② 교리나 신조, 혹은 신학에서 이분법적 사고구조를 강조하는 종교일수록 종교적 배타성이 강하며 ③ 종교적 배타성은 선민의식 혹은 종교적 우월주의가 강할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들고 있다. : 이 원규,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pp.251-254.

25) 이 원규b,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p.250. ; Laythe et al., "Religious fundamentalism as a predictor of prejudice: a two component model", *JSSR* 41(4), 2002, pp.623-625.

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때의 훼손은 근본주의 개신교가 불상을 훼손하거나 사찰에 방화를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땅 밟기와 같은 사찰 내에서 이루어진 공격적 선교활동을 포함한다. 이런 불미스런 사건들은 그 동안 수없이 일어났는데, 그 배후에 다른 종교에 대한 근본주의의 과도한 배타주의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sup>26)</sup>

물론 한국교회에 근본주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진보신학자들은 종교 다원주의를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수용하면서 근본주의 교회가 타종교에 대해 보다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요구한다. 반면 근본주의 진영은 다른 종교와 문화에 대해 예의를 갖추어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를 보수하려면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에게 종교 다원주의는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하는 최악의 범죄이다. 그리고 이런 목소리가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다원화사회인 한국에서 종교갈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 2. 상대 종교에 대한 무지

종교 간 갈등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의 하나는 상대 종교에 대한 이해의 부재 즉 무지이다. 현재 한국종교문화의 가장 큰 비극 중의 하나는 종교인들이 상대 종교에 대해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알고 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종교문화 전반에 깔려있는 배타성과 보수성에 기인한다. 즉 한국의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신앙

하는 종교에 대한 철저한 내적인 정체성 강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대 종교에 마음을 여는 경우가 극히 미미하다. 상대 종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선형적·감성적으로 차단시킴으로써 상대 종교에 대한 무지를 자초한다.<sup>27)</sup>

한국종교인의 상대 종교에 대한 무지는 종교지도자들에게서 기인하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목사와 승려가 상대 종교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학습된 신도들도 상대 종교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감성적·감정적으로 배타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종교지도자인 목사와 승려의 상대 종교에 대한 이해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규교육기관인 대학의 교과과정에 상대 종교에 대한 교과목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다.

2011년 현재, 불교학 또는 기독교학에 관련된 학과 및 전공이 개설된 주요 대학과 일반대학원 중 타종교 관련 교과목을 개설한 곳은 극히 적다. 동국대(서울), 동국대(경주), 중앙승가대, 원광대, 위덕대, 동명대 등 불교학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과 일반대학원들에서는 기독교를 비롯한 타종교 관련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과 일반대학원이 한 곳도 없다. 한국불교의 승려교육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정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보다 불교교단에서 자체교육기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강원(승가대학)이 보다 대중적이다. 하지만 여러

26) 배 덕만, 전계서, p.60.

27) 김 진, 「종교간의 갈등과 화해」, 『불교학연구』 제2호(서울: 불교학연구회, 2001), p.39.

강원들의 교과과정에서도 다른 종교와 관련한 교과목을 찾기는 힘들며,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에서 현재 승가교육의 현대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강원 교과과정 개편안에도 다른 종교 관련 교과목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

기독교학 관련 학과가 있는 주요대학들 중에서는 연세대 일반대학원의 신학과와 감신대 학부과정의 종교철학전공 이외에는 타종교 관련 교과목을 개설한 곳을 찾기 힘들다. 연세대 일반대학원 신학과에 ‘유교연구’, ‘불교연구’, ‘기독교와 타종교’, ‘이슬람교연구’, ‘도교연구’ 등 5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감신대 학부과정의 종교철학전공에 ‘불교철학과 현대철학’, ‘이슬람과 기독교’, ‘유교와 기독교’, ‘인도사상’, ‘노장사상연구’, ‘이슬람문화와 종교’ 등 6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불교학 또는 기독교학 관련 학과가 있는 주요 대학(원)들에서는 대부분 (비교)종교학과 종교사 교과에서 타종교에 대한 이해를 종교학 차원에서 개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수준으로는 타종교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 없다. 정규교육과정에서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를 갖추지 못한 성직자는 정식적인 목사 또는 승려가 되고서도 상대 종교에 대하여 무지할 수 있다. 성직자가 되고 난후 대학시절 공부 못한 타종교에 대하여 별도로 공부하기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성직자의 무지는 설교와 법문 혹은 일상의 대화속에서 신도들에게로 전해져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에 상대 종교에 대한 배타성을 가지게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종교 간 상호 무지는 어느 특정 종교 사이에서만 팽배한 것이 아닌 한국 종교 전반에 흐르는 문제이며 결국 이러한 상대 종교들에 대한 무지가 종교 간의 갈등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하나만을 아는 것은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이라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종교 간 갈등의 해결에는 상대종교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종교적 영역에서의 이해란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인식론적으로 알아 그 뜻을 비로소 파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내 존재가 타자의 가르침이나 주장을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종교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깊은 상호 이해가 진행된다면 종교 간 갈등은 그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sup>28)</sup>

### 3. 한국종교시장의 경쟁화

한국의 종교 상황은 ‘종교백화점’이나 ‘종교시장’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표현에는 한국 사회에 종교단체의 수가 많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들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일종의 선택 가능한 상품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통계청의 2005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 53%가 스스로를 종교인으로 인식한다. 한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종교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시간과 재화 등을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버거(P. Berger)가 ‘시장상황(market situation)’이라고 부르는 상황이 도래했음을 의미한다.<sup>29)</sup> 다양한 종교들에 대하여 이제 사람들은 백화점에서 물건 고르듯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각

28) 상계서, pp.40-41.

29) Peter Berger, *The Sacred Canopy: Elements of a Sociological Theory of Religion*(New York: Doubleday, 1967), p.138.

종교들은 자신의 제품(종교)이 최고라는 것을 소비자(사람들)에게 설득하여 고객(신도)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전에는 권위 있게 부과될 수 있었던 종교적 전통을 이제는 시장에 내놓고 더 이상 '구매'하도록 강요받지 않는 고객들에게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집단의 '옛 고객들' 간에는 아직도 강한 '제품 충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다원주의 상황에서는 종교적인 제 전통을 불변의 진리로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다.<sup>30)</sup>

〈표 1〉 종교별 교세 증감 현황

구분	종단·교단 수			교당 수			교직자 수		
	2002	2008	증감(%)	2002	2008	증감(%)	2002	2008	증감(%)
불교	105	103	▼ 2	22,072	21,935	▼ 1	41,362	49,408	△ 19
개신교	170	125	▼ 26	60,785	58,612	▼ 4	124,310	95,596	▼ 23
기독교	1	1	0	1,258	1,511	△ 20	12,536	14,597	△ 16
유교	1	1	0	730	1,049	△ 44	31,833	300	▼ 99
천도교	1	1	0	283	108	▼ 62	5,670	1,500	▼ 74
원불교	1	1	0	520	561	△ 8	2,455	1,886	▼ 23
대종교	1	1	0	109	22	▼ 80	358	22	▼ 94
기타 종교	44	38	▼ 14	4,992	6,710	△ 34	280,685	201,488	▼ 28
계	324	271		90,749	90,508		499,209	364,797	

주) \* 유교의 교당 수치는 향교, 書院, 祠宇를 합산한 것임.

\* 대종교의 경우, 현재 양측 수치의 합산이 어려운 상황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서울: 주식회사 모나미, 2008), p.10.

이와 같이 한국의 종교 다원주의 상황은 종교의 시장상황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그 시장상황이 다시금 경쟁상황을 초래하면서 종교

30) 이 원규a, 전제서, pp.39-40.

집단이 경쟁적으로 신도를 유치하려는 온갖 노력을 유발시켰다. 경쟁화된 한국종교시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별 교회·사찰은 물론이고 교단·종단까지도 도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은 2008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표 1〉의 종교별 교세 증감에서 실제 확인할 수 있다.<sup>31)</sup> 2002년 한국종교계의 전체 교당 수는 90,749곳이었으나 2008년에는 90,508곳으로 감소하였다. 나아가 교단·종단 수도 2002년 324개에서 2008년 271개로 감소하였다. 불교의 법당 수는 22,072곳에서 21,935곳으로 137곳(1%)이 줄어들었으며 종단 수도 105개에서 103개로 2개(2%)의 종단이 사라졌다. 그런데 개신교의 교회 수와 교단 수 감소는 더욱 눈에 띈다. 교회 수는 60,785곳에서 58,612곳으로 2,173곳(4%)으로 감소하였으며 교단 수는 170개에서 125개로 줄어들어 45개(26%)의 교단이 사라졌다.

이런 한국종교시장의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종교 간 갈등은 불가피해진다. 특히 개신교의 강한 배타주의적 성격은 이러한 경쟁 상황 속에서 종교인구 중 신도 수가 가장 많은 불교를 더욱 타도와 정복의 대상으로 보게 만들었을 여지가 있다. 더욱이 개신교가 불교와의 경쟁에서 이기려는 방식이 주로 불교를 매도하고 비난하는 부정적인 경쟁방식이었음을 감안할 때,<sup>32)</sup> 이로 인해 두 종교 간의 갈등이 치열한 대립구도로 형성되고 있으며 또한 상호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31) 종교별 교세, 즉 종단·교단 수, 교당 수, 교직자 수와 관련한 통계자료로는 2008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한국의 종교현황』이 가장 공신력 있는 최근의 자료이다.

32) 이와 같은 개신교의 부정적 경쟁방식의 사례로는 그치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훼손 사건', '사찰방화', '땅 밟기' 등을 들 수 있다.



#### 4. 개신교의 영남권 선교 공격성 강화

위기의식은 때때로 공격성으로 표출된다. 우리는 개신교의 교단 수, 교당 수, 교직자 수가 불교와 가톨릭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하였음을 <표 1>의 종교별 교세 증감 현황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이들 수치의 감소만으로도 개신교는 경쟁이 심화된 한국종교시장에서 위기의식을 느꼈을 수 있다. 그런데 개신교는 신도 수에 있어서도 두 종교에 비하여 확연한 감소가 있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sup>33)</sup> 1995년에서 2005년 사이에 불교는 인구수가 약간 증가한 반면에 인구비중은 감소하였고,<sup>34)</sup> 가톨릭은 인구수와 인구비중이 모두 급증한<sup>35)</sup> 반면 개신교는 인구수와 인구비중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sup>36)</sup>

신도 수의 감소는 종교집단으로 하여금 어떤 수치보다 더욱더 근본적인 위기의식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전래 이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성장세를 지속해온 개신교로서는 한국사회에

33) 혹자는 2011년 현재의 종교갈등을 고찰하면서 2005년의 통계청 발표 자료를 사용하고 있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계청의 종교인구조사는 10년 주기로 이루어지며, 다음 조사는 2015년에 발표되기 때문에 2005년 자료가 가장 최근의 자료이다.

34) 불교 인구수는 1995년 1천 32만 1천명에서 2005년 1천 72만 6천명으로 약 40만 5천명(3.9%) 증가하였으며, 전체 인구 대비 불교 인구 비율은 1995년 23.2%에서 2005년 22.8%으로 약 0.4% 감소하였다.

35) 가톨릭 인구수는 1995년 295만 1천명에서 2005년 514만 6천명으로 219만 5천명(74.4%)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인구 대비 가톨릭 인구 비율도 6.6%에서 10.9%로 4.3% 증가하였다.

36) 개신교 인구수는 1995년 876만 명에서 2005년 861만 6천명으로 14만 4천명(-1.6%) 감소하였으며, 전체 인구 대비 개신교 인구 비율도 19.7%에서 18.3%로 1.4% 감소하였다.

서 경쟁 종교라 할 수 있는 불교·가톨릭과는 달리 유독 개신교의 신도 수만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분명 위기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sup>37)</sup>

위기의식은 공격성으로 표출되고는 하는데, 교세 위축으로 인한 개신교의 위기의식은 MB정부 들어서 영남지역에 대한 공격적 선교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MB정부 시기에 영남권 선교의 강화된 공격성을 보여준 사례로는 ‘동화사 땅 밟기’ 동영상, 대구 팔공산 역사문화공원 계획 취소, KTX 울산역의 통도사 부기(附記) 취소 등을 들 수 있다. ‘동화사 땅 밟기’ 동영상은 대구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 대구 지하철 참사, 강력범죄의 증가 나아가 대구 경제의 쇠락, 인구의 감소, 이혼율 전국 최고 기록 등이 대구 지역에서 이상승배를 하는 불교가 융성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개신교의 공격적 선교가 불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전도된 것이다. 그리고 대구 팔공산 역사문화공원 계획 취소와 KTX 울산역의 통도사 부기 취소는 확정되었던 정부의 계획이 영남지역 개신교계의 반대로 취소된 사례들이다. 이는 불교 관련 정부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살펴본다면, 이전에 영남지역의 불교 관련 정부사업과 관련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개신교가 상당히 공세적으로 방법을 전환한 것이다.

37) 개신교의 당시 위기의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났으나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국가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한국CCC 총재 김준곤 목사의 말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세계 50개 대형 교회 가운데 25개가 한국에 있다. 한국 교회에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들이 많은데,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기독교인이 14만 명이나 줄었다. 정부에서 교회에 상처를 주기 위해 (이런 발표를) 한 것으로 알았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진짜 같다.” 김목사의 발언은 종교 인구 통계가 발표된 이후 개신교계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흔히 조직 내지 집단은 자신들의 취약지역에 대하여 오히려 공격을 강화하여 위기를 극복하고는 하는데, 개신교의 영남지역에 대한 공격적 선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영남지역은 전통적으로 불교의 교세가 강한 지역인데다 상기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불교인구비율이 경남 3.8%, 경북 2.9% 등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전래 이후 성장세를 유지해온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종교 교세의 측정에 있어서 주요 지표가 되는 신도 수와 종단·교단 수, 교당 수, 교직자 수 등 모든 분야에서의 전례 없는 쇠퇴는 위기의식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에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개신교는 위기를 공격적 선교로 극복하고자, 특히 불교의 교세는 강하나 개신교의 교세는 약한 영남지역에서 선교의 공격성을 보다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5. 장로 이명박 정부의 출범, 개신교의 사회 주류의식 심화와

### 불교의 위기의식 표출

대한민국은 대통령중심제의 국가이기에 대통령이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막강하다. 헌법 제20조 ①항과 ②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종교 역시도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개인의 종교 부각은 종교 간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종교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현 정부 들어 종교갈등이 유난히 심각해졌으며 이는 개신교 장로인 대통령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 집권초기 소망교회 인맥을 요직에 등용해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고 청와대에 목사를 초빙해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도 들려왔다. 공무원들이 개신교 장로인 대통령과 기독교 신자인 기관장을 의식해 정책을 집행한다는 일각의 여론도 존재한다.<sup>38)</sup> 그리고 대통령 자신도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석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려 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장로 대통령 시대는 개신교로 하여금 자신들이 사회 주류라는 의식을 깊게 심어줄 수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의 사회 주류화는 MB정부 들어 근일 간에 형성된 현상은 아니다. 각 종교인구 대비 국회의원 비율, 정부 각료 비율, 자치단체장 비율 등에서 개신교가 불교를 오래 전에 앞섰다는 것은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놀라운 일도 아니다. 또한 종교계 운영 사립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의 수와 복지시설의 수에 있어서도 불교는 개신교와 비교가 되지 못하며 개신교 전래 이후 한 번도 앞선 적이 없다. 이밖에 언제부터인가 기업체 CEO 등 경제인의 수에 있어서도 개신교는 불교를 앞서 있다.

그 동안 불교계는 개신교의 이런 사회 주류화에 대하여 의아할 정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다. 정권의 홀대나 개신교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서도 어지간해서는 대응을 하지 않았었다. 오히려 '그러다 말겠지, 더 크고 넓은 불교가 참아야지, 맞서 싸우는 것은 불교적이지

38) 《서울신문》, 2010. 12. 25.

못하다’는 정서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MB정부에 들어서는 불교계의 대응방식이 확연하게 공세적으로 바뀌었다. 현 정부 출범 후 개신교가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각 분야에서 우월적인 입장을 가진데서 그치지 않고 그 영향력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대한 일종의 위기의식의 표출로 생각된다.<sup>39)</sup> 불교의 입장에서는 개신교가 장로 대통령의 당선으로 자신감 내지 승리감까지 보이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 특히 영남지역에서 KTX 울산역에 ‘통도사’를 병기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과 이미 확정되었던 대구 팔공산 역사문화공원 계획이 개신교계의 반대로 취소된 것에 불교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불교 텃밭’ 영남지역에서조차 개신교에 밀리는 현실, 즉 개신교계의 반발로 이미 결정된 것이 백지화될 만큼 현 정권이 개신교 주류 사회라는데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개신교계의 정부기관에 대한 압박행위가 통하는 것을 보며 불교계에서는 ‘장로 대통령 시대가 열린 후 정부 위에 교회가 있다’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sup>40)</sup> 이러한 장로 대통령 시대가 주는 전례 없는 불이익으로 인한 불교계의 피해의식은 개신교의 도를 넘은 공격적 선교행위와 어우러져 불교계로 하여금 정부와 개신교에 대한 공세적 대응을 유발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개신교의 사회 주류 의식 심화와 불교의 위기의식 표출’은 사회 기저에 잠재해있던 ‘한국 개신교 근본주의의 배타성’, ‘한국종교시장의 경쟁화와 개신교 교세

의 쇠퇴’, ‘한국개신교의 위기의식 증가와 선교의 공격성 강화’, ‘상대 종교에 대한 무지’ 등이 개신교와 불교 간 갈등 원인으로 표면화하는 촉매가 되었을 여지가 있다.

## V. 이명박 정부 시기의 종교갈등해소 실천방안

MB정부 출범 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종교갈등은 가급적 MB정부에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차기 정부로 문제가 이양되더라도 반드시 해소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지금까지 종교갈등해소를 위한 방안들은 적지 않게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상적이며 담론적인 방안의 제시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노정되어 왔다. 이에 본장에서는 종교집단들 간의 갈등 해소와 종교집단과 정부 간 갈등해소를 위한 보다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 1. 불교와 개신교 간 갈등해소를 위한 종교집단의 실천방안

#### 1) 종교협력운동의 대중화

한국사회의 종교협력을 위한 종교지도자 모임으로는 ‘한국종교인 평화회의(KCRP, 1986년 출범)’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 1998년 출범)’ 그리고 ‘은겨레손잡기운동본부(2000년 출범)’가 있다. 이들 모임은 ‘7대 종단’ 즉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의 수장들의 협의체이다.

39) 《주간경향》, 900호, 2010. 11. 16, pp.66-67.

40) 동계서.

이들 모임들은 다종교사회인 한국사회에서 그 동안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는 이들 모임의 수장들이 함께 다른 종단의 유적지를 찾아가 대화하며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 그 지도자들이 청와대에 초청되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다분히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향한 종교계 수장들의 상징적 제스처의 효과를 보여준다. 물론 종교계 수장의 행동은 상당 부분 상징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필자도 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종교계 수장의 상징적 제스처에 담긴 메시지가 대중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종교간 대화와 협력이 수장들의 상징적 제스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실제 변화와 쇄신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의 종교협력운동은 상층부 즉 종단 본부와 지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직까지 대중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 비록 종교 지도자들의 화기에애한 모습과 부처님 오신날과 성탄절에 기독교와 불교가 서로 축하하고 갖가지 종교협력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감각으로 다가가지 못할 뿐 아니라 각 종단 내에서도 현장에까지 그 분위기가 전달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sup>41)</sup>

41) 변 진홍, 「한국사회의 종교 공존과 종교협력운동-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의 활동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제56집(익산: 한국종교학회, 2009), pp. 2-3.

물론 이런 가운데에서도 한 지역에 있는 성당과 교회, 사찰이 십여 년째 힘을 합해 소외된 이웃돕기에 나서고 있는 종교협력사례가 있다. 강북구에 있는 서울대교구의 수유1동 성당,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송암교회 그리고 대한불교조계종의 화계사가 손을 잡고 2000년부터 연합바자회를 개최, 그 수익금을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처음 연합바자회를 추진할 당시에는 타 종교와의 연합행사라는 이유로 내부에서 일부 반발도 있었지만 사랑을 나누는다는 의미에서 뜻이 모아졌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노력들이 한국종교계 전체로 확산되어 각 지역사회 내에서 이른바 7대종단의 교역자와 신도들이 함께 바자회, 체육대회, 문화행사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면, 한국의 종교협력운동은 대중화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sup>42)</sup> 왜냐하면 각 종단 사이에는 교리, 종교의식, 상징체계, 구원론에서 차이와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공통당하는 생명과 인간을 제도하여 다함께 평화로운 생명 공동체, 대동 세계를 이루어 나가려는 궁극적 목표는 서로 통하고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만 종교협력운동의 방법은 위의 사례처럼 인격적 교류와 실천적 정행(正行)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20세기 후반 종교학계와 종교신학계가 경험적 사실로 발견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종교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는 이론적·지식적 대화보다는 인격적 교류와 실천적 정행(正行)에 동참하는 것이 더 큰 진전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sup>43)</sup>

42) 상계서.

43) 김 경재, 「종교간의 갈등현황과 그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한국 개신교와 불교의 상호관계성을 중심으로-」, 『신학연구』 제42집(오산: 한신신학연구소, 2001), pp. 252-253.

## 2) 이웃종교<sup>44)</sup>에 대한 교육과 학습

종교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배타주의적 신도들이나 종파는 제한된 경험과 지식으로 인한 편협한 사고가 독단적·독선적 종교인을 양산하게 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각 종단들이 공유하는 한국의 종교사, 종교문화 및 세계문화사에 대한 통시적 교육을 통해 이해 지평을 넓게 해줘야 한다.

예를 들면, 매우 독실한 개신교 신자는 한국 불교사, 사찰의 가람 배치의 의미, 불교예술의 상징성, 불상이나 불교 석탑, 탱화나 불상들의 다양한 의미 등에 대하여 아무런 예비지식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아는 만큼 가까워지고 친밀해진다. 이들에게 한국 불교사 및 사찰 소개, 불상·석탑·탱화 등 불교 예술에 대한 이해 등을 종교적 교리를 떠나 한국인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전통문화로써 교육하고 학습한다면 불교에 대한 친밀감을 갖게 될 수 있다. 또한 한국 불자들에게도 개화기에 개신교가 한국의 교육·의료·종교 사상에 눈부시게 공헌한 업적들과 기독교 종교예술의 걸작들을 더 심층적으로 이해시킴으로써 타종교에 대한 이해의 문을 넓힐 수 있다. 문제의 요점은 직접적인 종교교리, 종교의식, 신학의 비교연구보다는 종교문화 또는 종교예술의 이해라고 하는 간접적 방법을 통한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이다.<sup>45)</sup>

그런데 한국의 개신교와 불교의 신도들에게 이웃종교에 대한 교

44) '이웃종교'라는 용어는 KCRP가 1998년 종교청년평화캠프를 개최하면서 처음 사용하였는데, 이후 KCRP 회원 종단 모두가 이 용어를 공식 사용하게 되었다. :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한국종교인평화회의 20년사』(서울: 삼토피아출판, 2006), p.94.

45) 김 경재, 전계서, pp.249.

육과 학습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교역자, 즉 목사와 승려에게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 지평을 확장하는 교육이다. 신도 교육의 주체는 바로 이들 교역자들이며, 교역자들의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는 신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종단의 교역자 양성 과정의 교과과정에 이웃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교과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IV장의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각 종단의 교역자 양성을 위한 정규교육과정은 비교종교학과 종교사를 통하여 상대 종교를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다. 향후에는 각 종단의 교역자 양성과정의 교과과정 속에 이웃종교의 교리에 대한 기초교육을 온전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역자들의 이웃종교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신도들에게 이웃종교를 온전히 이해시키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아는 것만큼 이해된다”는 해석학적 원리는 역으로 종교인[교역자와 신도]들의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 지평의 확대를 위하여 그 교육과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한다.

## 2. 불교·개신교와 정부 간 갈등해소를 위한 종교집단과 정부의 실천방안

### 1) 종교의 홀로서기: 종교의 국고 지원 의존 탈피

한국사회에서 특정 종교집단과 정부와의 갈등은 상당부분 국고 지원에 대한 상대 종교의 이익제기로 촉발되고 있다. 종교중립적인 대의명분이 있어야 할 국고 지원에 있어서 종교집단과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하며, 이에 특정 종교집단이 나름의 명분을 확보

하고 정부로부터 국고를 지원받기 때문이다.

종교집단 자체의 조직 운영과 그 부수적 사업들은 신도들로부터 기증된 보시금 내지 헌금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의 국고에 의존하여 종교조직을 운영하고 사업을 전개한다면, 종교가 국가권력에 예속될 여지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국고 지원에 의한 종교계의 재원 확보는 종교집단 존속의 주요 근간인 신도에 대한 의존도를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신도에 대한 의존도의 저하는 종교집단의 포교 소홀로 연결된다. 종교집단의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에 의존하면 할수록 신도에 대한 의존은 비례하여 감소하는 것이다. 이는 종교집단이 사람들의 영혼과 영성에 의지하여 교리를 전파하는 일을 소홀히 하여 궁극적으로는 그 종교성이 상실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어느 종교도 국가권력이나 정부의 지원이나 시혜에 기대서는 안 되며, 현대 종교는 순전히 개인의 영혼과 영성에 호소하여야 한다. 한 종교가 사회의 지배적 종교로 부와 권력을 독점하던 시대는 영구히 갔다. 민주사회, 가치다원 사회, 종교다원 사회로의 이행이 역사의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추세이다. 이제 어느 종교도 지나간 시대에 누렸던 독점적 지위를 다시 누릴 수 없으며 거기에 향수를 지녀서도 안 된다. 조선조 시대 유교나 고려 시대 불교가 누렸던 것과 같은 영광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또 단지 '전통'이라는 이름[전통문화, 전통종교]에 의지해서 혜택을 기대할 수도 없다. 1970~80년대부터 급속히 성장해서 한국 사회의 주류 종교의 하나

로 자리 잡은 기독교(개신교·가톨릭) 역시 이제는 권력의 유혹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sup>46)</sup>

현대 다종교 사회, 탈종교 시대의 종교들은 외부의 도움보다는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어떤 종교든 순전히 메시지 자체의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종교는 이전보다 더 순수한 종교, 더 진정성을 지닌 신자들을 확보하는 종교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sup>47)</sup>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는 세속적 권력에 초연해서 자존심을 지킬 때 오히려 존경을 받고 종교로서의 본래 기능도 유지할 수 있었다. 고려불교의 권력화와 쇠퇴의 과정이 그 좋은 예이다. 종교가 지나치게 정치와 유착되었을 때 종교권력은 상승하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승자박이 되어 쇠퇴의 길을 걸게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2)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의 지속·확대와

### 종교차별 공무원 징계의 법규화

정부의 행정시스템은 특정종교가 차지할 수 없는 국민 모두의 공동자산이므로 국민 누구나 종교적 편향 없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sup>48)</sup> 이를 위해서는 국가행정의 집행자인 공직자의 종교중립적인 자세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MB정부 들어 공직자들 가운데 일부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

46) 길 회성, 「한국 종교계의 상생을 위한 종교간 대화」, 『종교와 사회통합-상생을 위한 7대 종교간 대화』(서울: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2011), p.3.

47) 동계서.

48) 박 광서, 「공격적 선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불교평론』 제46집(서울: 만해사상 실천선양회, 2011), pp.163-164.

고 지각없는 종교차별 행동을 하여 적지 않게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sup>49)</sup> 이에 MB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4조 ②항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종교차별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무조례에 종교차별 금지조항을 잇따라 신설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를 신고받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직자종교차별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의 종교차별 금지조항과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직무상 종교중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징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공직자의 직무상 종교중립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공직자 스스로 종교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직 신분을 이용한 종교 활동은 공권력의 사적 도용이며, 이러한 행위가 타 종교인이나 무종교인들로 하여금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편향적이라면 공직자로서는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된다는 사실이다. 둘째, 무지이든 의도적이든 공직의 신분을 망각한 채 특정종교 편향적 발언이나 행정 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이다.<sup>50)</sup> 일반적으로 인식의 개선에는 교육이 효과적이다. 공직자의 직무상 종교중립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위해

서는 MB정부 들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그 지속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종교차별에 대한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종교차별 행위에 대한 징계가 뒤따라야만 한다. 현행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는 종교차별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아닌 그 소속 기관에 심의결과를 통고하는 기능만을 담당한다. 종교차별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소속 기관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서 종교차별로 판정된 사안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시정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차별에 대한 근거 법규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종교편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공무원의 종교차별 행위는 지속될 여지가 많다. 이에 공무원의 종교차별을 엄단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등에 종교차별 공무원에 대한 처벌조항을 추가하여야만 한다.

### 3) 증오범죄법 제정

2011년 6월 13일 종지협 의 7대 종단 대표들은 청와대의 오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증오범죄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 증오범죄법은 종교 간 편협 방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은 아니며, 인종과 문화, 종교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문화·다민족·다종교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인종, 문화, 종교 그밖에 그 어떤 분야에서든 차별이나 혐오로 인한 사회적

49) 공직자의 종교편향 사례들은 본고 'III-2. 불교·개신교와 정부 간 갈등 사례 범주'를 참고하기 바란다.

50) 상계서, p.163.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하지만 ‘혐오범죄방지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 미국사회에서 이 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사람들은 국가법(중오범죄법)으로 보호되어 특별한 대우를 받는 집단이 생겨나 국가를 분열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법안은 국민이 더 이상 법 아래에서 평등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sup>51)</sup> 즉 중오범죄법이 불평등성과 역차별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종교계에서도 중오범죄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는 종교간 불평등과 역차별의 문제를 들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는 여러 종교가 상존하고 있으면서도 외국의 사례와 같은 종교전쟁 내지 종교분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오범죄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주장의 이면을 살펴보면, 그동안 공격적 선교 활동을 펼친 특정 주류교단이 자신들의 선교 및 목회활동에 제약이 클 것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입법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해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오범죄법은 특정 이념 집단이 다른 상대에게 혐오감과 피해를 주는 것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제정은 38개의 종교와 271개의 종파가 공존하는 한국사회에서 특정종교가 자신들의 교리를 내세워 다른 종교에 피해를 주는 일을 막을 수 있게 해준다. 정부는 한국사회에서는 그 어느 다종교국가에서 보다 여러 종교가 종교간 화합이 잘 되고 있다는 고정 관

51) Espejo Roman, *What is a Hate Crime?*(Greenhaven Press, 2002), pp.22-23.; 이 동명·노 상욱, 「미국의 중오범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1집(광주: 한국법학회, 2008), p.372.

념에서 벗어나 분쟁이 폭발하지 않았을 뿐 갈등은 위험 수위에 올라 있다라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중오범죄법 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특정종교가 특정교리를 내세워 이웃종교를 폄훼하고 피해주는 일이 이제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 VI. 결론

현 MB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종교갈등으로 국정운영에 혼란을 겪어왔다. 종교다원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종교갈등은 피할 수 없으나, 현 정부는 정부가 그 촉발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개신교와 불교 간 갈등이 잠재된 한국사회에서 개신교 성향이 강한 MB정부는 보다 더 종교 관련 국정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는 국정 운영의 기획자이자 집행자인 공무원들이 업무 속에서 종교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함을 의미한다. 특히 독실한 종교생활을 하는 공무원일수록 일상생활에서 습관화된 사고와 행동이 공무로 투영될 때는 종교차별 내지 종교편향으로 간주될 수 있음에 유념해야한다.

MB정부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정부가 종교갈등의 한 주축이 되었으나, 종교다원사회에서 종교갈등은 종교집단 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대등한 세력을 가진 종교들이 공존하는 종교다원사회에서는 종교가 권력의 독점만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독점도 상실하게 된다. 각 종교들이 상대 종교의 권력과 진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웃종교에 대한 교육



과 학습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종교협력운동의 대중화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아울러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국고 지원은 상대 종교에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기에 각 종교는 국고 지원에서 탈피하여 홀로서기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홀로서기는 종교들로 하여금 종교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자성(自省)과 쇄신(刷新) 결사(結社)' 추진은 현대 종교다원사회를 살아가는 종교계의 올바른 상황진단에 따른 바람직한 방향제시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김중서, 『종교사회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원회, 『부처님의 생애』, 서울: 조계종출판사, 2010.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 서울: 주식회사 모나미, 2008.
- 박광서, 「공격적 선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불교평론』 제46집, 서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11.
- 배덕만, 『한국 개신교 근본주의』, 대전: 도서출판 대장간, 2010.
- 이만열, 『한국기독교의 민족의식』, 서울: 지식산업사, 1991.
- 이원규,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한국종교인평화회의 20년사』, 서울: 삼토피아솔루션, 2006.

### —논문

- 김희성, 「한국 종교계의 상생을 위한 종교간 대화」, 『종교와 사회통합-상생을 위한 7대 종교간 대화』, 서울: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2011.
- 김경재, 「종교간의 갈등현황과 그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한국 개신교와 불교의 상호관계성을 중심으로-」, 『신학연구』 제42집, 오산: 한신신학연구소, 2001.
- 김용철, 「한국불교 포교 현황 분석과 진단- 통계청, 1985/1995/2005 인구주택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불교 미래를 준비한다』,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화엄회, 2006.

- 김 진, 「종교간의 갈등과 화해」, 『불교학연구』 제2호, 서울: 불교학연구회, 2001.
- 박명수, 「다종교 사회에서의 한국 개신교와 국가권력」, 『종교연구』 제54집, 익산: 한국종교학회, 2009.
- 박수호, 「종교정책을 통해 본 국가-종교간 관계: 한국 불교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39집, 대구: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9.
- 변진흥, 「한국사회의 종교 공존과 종교협력운동-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의 활동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제56집, 익산: 한국종교학회, 2009.
- 이동명·노상욱, 「미국의 증오범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1집, 광주: 한국법학회, 2008.
- 이상직, 「한국교회의 정통주의와 종교다원주의 사이의 갈등요인의 분석과 종교간의 대화에 대한 새로운 대안의 모색」, 『신학사상』 통권 제101호,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8.
- 이원규, 「한국교회의 종교적 배타성의 문제」, 『기독교사상』 통권 제479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이진구, 「정교분리 담론과 정교유착의 현실」, 『불교평론』 통권 7호, 서울: 불교시대사, 2001.

—외국문헌

- Berger, Peter. *The Sacred Canopy: Elements of a Sociological Theory of Religion*, New York: Doubleday, 1967.
- Brian Laythe, Deborah G. Bringle and Lee A. Kirkpatrick, "Religious fundamentalism as a predictor of prejudice: a two component model", *JSSR*

41(4), 2002, pp.623~625.

- Hick, John. *An Interpretation of Religion to the Transcenden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 McGuire, Meredith B. *Religion: The Social Context*, 3rd ed.,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2.
- Roman, Espejo. *What is a Hate Crime?*, Greenhaven Press, 2002.

—기타자료

- 《광주일보》, 2008. 09. 07.
- 《국민일보》, 2010. 09. 08.
- 《불교신문》, 2008. 07. 02.
- 《서울신문》, 2010. 12. 25.
- 《시사저널》, 887호, 2006. 10. 24.
- 《주간경향》, 900호, 2010. 11. 16.
- 《한겨레21》, 536호, 2004. 12. 02.
- 대한민국 성시화 운동본부 홈페이지(<http://www.holy25.com>)

# Cases of Religious Conflicts During the Lee Myung-bak Government Period And Action Plans to Solve the Problems

Cho, Ki-ryong

Korea Buddhist Research Institute of Dongguk University

The religious conflicts can be categorized into the conflicts between different religious groups, the conflicts within the religious groups, and the conflicts between a religious group and the larger society. Since the inauguration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latent religious conflicts have risen to the surface, and the conflicts between Protestantism and Buddhism and the conflicts between Buddhism and the government are becoming intensified. So this paper examines the religious conflicts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solutions to them, focusing on the conflicts between the religious groups and the conflicts between the religious groups and the larger society. The cases of conflicts between Protestantism and Buddhism that have intensified since Lee Myung-bak government came to power can be categorized into the Prayer Walking and the Holy City

Movement, and the magnitude of the problem lies in the fact that these movements are taking place not by chance but based on the authority of the Bible. The cases of conflicts between Buddhism, Protestantism, and the government can be categorized into the government's religious bias and the controversies over the appropriateness of government support, and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consists in the fact that the conflicts between the two religions are caused by the government, which should be neutral about religions, but instead acts as a vehicle for the conflicts. The religious conflicts that have surfaced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have been caused by various complex and organic factors such as latent exclusiveness of Korean Protestant fundamentalism, ignorance about the other religions, recently intensified competition in the Korean religion market, reinforcement of Protestants' missionary aggressiveness in the Yeongnam region, intensified social mainstream consciousness of Protestants caused by the inauguration of Lee Myung-bak, an elder of a church, administration, and expression of consciousness of crisis on the part of Buddhism. This researcher analyzed these causes and cases and examined popularization of the religious cooperation movement and education and learning about the neighboring religions as action plans of the religious groups

to solve the conflicts between Buddhism and Protestantism. And as action plans of the religious groups and the government attempt to solve the conflicts between Buddhism, Protestantism, and the government, I examined the self-reliance of religion to be freed from government support, continuance and expansion of preventive education on public officials against religious discrimination, legislation of disciplinary actions for public officials discriminating against religions, and enactment of hate crimes law.

**Key Word**

Religious Conflicts, Prayer Walking, Holy City Movement,

Religious Bias, Fundamentalism, Government Support, Hate Crimes

✎ 투고일자 2011.7.14 | 심사일자 2011.8.5 | 게재확정일자 2011.8.8